

## 대통령 개헌안 '민주이념 계승'

### 靑, 전문·기본권 우선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2면>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제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감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도 삭제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추가됐다. 다만 이 사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해 입법부에 공이 넘어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끝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에서 빠지게 됐다. 헌법에 반영할 역사적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너무 최근 일이란 시의성도 고려됐다.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전북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상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가 2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외 국회연구기관 연구원, 전북도 출연기관장, 시·군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업, 콘텐츠, 섬유, 자동차 분야 기업대표, 도내 대학생 등 도민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전문에 4·19, 5·18, 부마, 6·10항쟁 등이 포함  
생명·안전·정보기본권 등 신설... 주제는 '사람'  
감사 영장청구권 조항·군인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삽입... 기준은 국회가 논의해야"

조국 수석은 질의응답을 통해 "역사적 평가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이 (1979년)6·10항쟁일텐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는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 바탕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해석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할 안전권도 신설했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 조항에서 삭제

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조국 수석은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하더라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합법이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논의할 것이다.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발안 조건 및 절차는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소환과 발안 조

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 이기에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 식으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제 역시 입법부인 국회의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만큼 국회가 '국민 발안 요건을 어느정도 해야 갖출 수 있느냐'를 판단해 법률로 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도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관련 "기준이 너무 낮으면 국회의원이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 결성

한전·LX공사·국민연금 등  
인사업무 교류·협약 체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인사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국도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인사혁신협의체'를 결성하고 인사업무 교류,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채용비리 사례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외부 인사위원 선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인사 업무와 관련한 교육, 워크숍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잇단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정이 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월 신입직원 95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 12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무전문성을 채용 우선기준으로 삼아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김양원 실장   곽승기 국장

### 도, 실·국장급 승진 단행

전북도가 20일 실·국장급 승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승진자는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직무대리와 곽승기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등 2명으로 도민안전 분야 주요현안 추진 책임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춘 자로 각각 판단해 인선했다. /김진성 기자

## MB "내일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이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후 19일 구속영장 청구 후 3일만에 열린다.

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 검찰, 오전부터 실질 심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결정 배경에 대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혐의이고, 그 혐의들이 계와 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러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고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쑥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도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속심사는 이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되고, 통상 불출석 의사를 밝힌 구속심사 피의자는 검찰 청사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이상민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